

“이것도 5·18 추모 작품인가요” 5·18센터 뒤덮은 모래주머니 ‘왜’

5·18기념재단·유족회 등 단체 입주한 5·18기념문화센터 입주 단체 사무실 빗물 새자 임시 방편... “리모델링 방침”

“이것도 5·18민중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품인가요?”

5·18 관련 단체들이 상주하고 있는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센터) 보수 공사가 예산 마련 문제로 부딪히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임시 방편으로 깔아둔 방수 목적 비닐과 이를 고정하는 모래주머니가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에 일부 방문객들이 이를 5·18 기념물로 오해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

17일 센터 등에 따르면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모자회)가 입주한 사무실의 옥상에 해당하는 공간에 수십여 m² 규모 비닐이 깔려있다.

깔린 비닐 위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용도의 주황색 모래주머니 수십여 개도 바둑판처럼 놓였다. 투명한 비닐 안쪽으로는 옥상 마감재인 타일이 보이지만 대체로 들뜨다 못해 부서진 모습이다.

비닐과 모래주머니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마감재 파손 등 문제로 입주 단체 사무실에 빗물이 새는 등 문제가 심해지자 지난 2022년 말 센터 측이 임시로 설치한 것이다.

당시 날이 풀린 뒤 곧장 보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여겨졌으나 예산 마련 문제로 부딪히면서 수년째 그대로 있다.

보수 작업 비용으로만 2억 2000여 만 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그간 광주시의 예산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모두 삭감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실상가상으로 올해의 경우 정부 긴급재정 기조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도 비닐을 걷어내지 못하는 속사정에 한 몫 한다.

입주 단체들은 땀질식 처방 장기화를 우려하는 동시에 비닐이 깔린 공간이 일반인이 오갈 수 있는 통행로라는 점에서 안전사고도 우려한다. 비닐이 깔린 공간은 센터 제1주차장과 대공연장 출입구, 주변 5·18기념공원 산책로와 직접 연결되는 통행로면서다.

나아가 5·18 관련 학습을 위해 5·18기념재

단을 찾는 방문객들이 정렬된 모래주머니들을 보며 5·18 추모 작품으로 오해하는 오해하는 촌극도 벌어진다고 설명한다.

5·18부상자회 전 간부는 “비만 오면 사무실 천장으로 물이 됐다. 광주시에 수어번 보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다 못한 이전 집행부가 사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며 “단체 차원 새 사무실 물색도 문제지만 언제까지고 땀질식 보수만 해선 안 될 노릇”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한 직원은 “비가 와서 비닐 위로 물이 고이거나 눈이 와서 비닐 위에 쌓일 경우 이곳을 오가는 방문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매년 5월을 맞아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은 모래주머니들을 보고 ‘5·18 기념 작품인가’고 번번이 물어보기까지 한다”며 “미관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정비되길 바란다”고 했다.

센터 측은 해당 구간 보수 작업을 넘어선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말 편성된 광주시 올해 예산 내역에서도 센터 보수 작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번 추경에도 재차 안전은 올렸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해당 구간 보수 정비에 국한될 경우 예산 집행이 어려울



지난 14일 점심때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 방수 목적으로 설치된 비닐과 모래주머니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것 같아 현재 노후화된 센터의 전반적인 내부 리모델링 계획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범위는 대공연장과 대동홀, 입주 단체 사무실을 모두 아우를 것”이라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연내 곧장 추진할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1996년 11월 현재 부지에 설치되었던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한 이후 진행된 5·18기념공원 조성 사업에서 2001년 준공,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임형백기자

“의사, 과거와 패턴 똑같다”...정부, ‘2천명 증원’ 변함 없을 듯

“잘못된 고리 반드시 끊어야” “다음 주 의대 교수 사직 유감” “사직서 수리 안돼...복귀 먼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 의들이 대거 이탈한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약순한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도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YTN 뉴스 인터뷰를 통해 “(2000년,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 비교하면) 전공의들이 먼

저 집단행동을 하고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약분업을 두고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 첫 해였던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약 4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전공의·의대생 등의 파업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박 2차관은 “정부는 이번에 이 같은 의사들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앞으로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제시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한 상태

다. 박 2차관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다행인 것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오랜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로 조정된 수치를 뒤로 실행 행사로 물리는 것이 의료계와의 문제 본질”이라며 “합리적 토의와 과학적 근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나아가 교수들이 진료현장까지 떠나는 경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2차관은 “개별 총장들 보시기에 학교에서 교수들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수리할 리가 없지 않느냐”며 “수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신분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가 (의료 현장에서) 나가있는 상태가 불법인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만 2000명 증원 수치를 풀라고 하지 말고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국민 생명 위태롭도록 하는 상황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0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1만1999명(92.9%)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약 9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 발송일로부터 20일 간 의견개진 기간을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한다.

박 2차관은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라며 “약 6000명 전공의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일부 100명 안 되는 분들이 수렴했다. 의견 개진할 기간을 부여했고 처분 가능한 상황이 곧 도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복귀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면서도 “속히 돌아온 경우와 아주 늦게 돌아온 경우 같을 순 없다”고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유급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도 속히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박 2차관은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간·야간 수업으로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시공초월(時空超越)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

영암 왕인문화 축제 2024

3.28. (목) ~ 3.31. (일)

전남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일원

주최 영암군

주관 영암문화관광재단

후원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